

108-64
=2

KOICA의 대중국 협력방향

장 현 식 외

1993. 6

KOICA 

한국국제협력단
연구조사국

- 목 차 -

I. 문 제 제 기	3
II. 중국의 정치·경제동향	3
1. 중국의 정치개혁 및 전망	3
2. 중국의 경제개혁 및 전망	5
III. 한·중 양국의 협력 및 교류현황	10
1. 한·중 수교의 의의 및 전망	10
2. 한·중 경험현황 및 전망	13
IV. KOICA의 對中國 協力方向	17
1. 기본 협력방향	17
2. 구체적 협력방향	18
V. 對中國 원조의 효과	19
1. 긍정적 측면	19
2. 부정적 측면	20
VI. 결 론	21

Appendix : 1. 북방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훈령 (국무총리 훈령 제278호)	
2. 한·중 정치외교 일지	
3. 한·중 경제협력에 관한 통계	
4. 일본의 對中國 협력동향	

I. 문 제 제 기

- 한·중 양국은 '92년 8월 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정치·외교 및 경제분야에서 이전보다 더욱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되었으며 향후 괄목할 만한 진전이 예상됨.
- 우리 정부는 한·중 수교로 조성된 정치·외교역량을 양국간의 경제협력의 교두보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對中國 관계개선, 한반도의 긴장완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에 도움을 주는 중·장기 외교목표를 설정하였음.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훈령 : 국무총리령 제 278호)
- 외무부의 신외교지침의 발표와 더불어 우리의 중·장기 외교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외교수단의 일환으로 특정국가와의 국제협력사업을 담당하는 KOICA의 對中國 協力方向을 모색하고자 함.

II. 중국의 정치·경제동향

1. 중국의 정치개혁 및 전망

가. 중국의 국제상황 인식변화

- 80년대 말까지는 미·소양대 초강국에 대한 "반패권주의 경쟁" 및 "3개 세계론"을 추구해 왔으나 '89년 이후 동구공산권 와해와 유럽질서재편, 아예 따른 범세계적 탈이데올로기화, 신중상주의의 대두 등으로 중국의 세계관과 대외 전략관이 대폭 수정됨.
- 이러한 신세계 질서에 부응하기 위해 '92.8.17 중국외교부장 전기침이 아·태지역 안전보장에 관해 ①UN헌장과 평화공존 5원칙준수 ②패권추구와 집단군사기구가담 포기 ③군비경쟁포기 ④우호선린 ⑤경제협력강화등 5개항을 제의

나. 개혁 현황

- '78년 덩소평이 개혁 및 개방정책을 시작한뒤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평화적인 환경조성 및 서방국가들과의 다변적 교류를 추진해옴.
- 이는 국내에서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등 4개 분야의 현대화를 완성하여 2000년까지 중국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해외자본, 기술, 지식등의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
- 그러나 국내정치면에서는 천안문사태에서 보아온 것처럼 공산당 지도노선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전혀없으며, 이는 소련 개혁·개방의 불안정한 전개로 인해 더욱 명분을 축적하고 있음.
- 제 14차 공산당전당대회에서는 차세대 정치경제이론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등사상"을 당헌에 공식명기 함으로써 덩소평 사후에도 공산당 1당 지배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

다. 향후 전망

- 중국의 세계 최초로 시험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현재까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국에서는 덩소평과 같은 혁명 1세대가 집권하고 있다는 점, 공산혁명이 반일 민족주의운동과 결합하여 성공했다는 국민적 정서, 역사적으로 권위주의가 정당화 되어 왔다는 점, 덩소평이 소련과 달리 경제개혁을 정치개혁에 앞서 실시한 결과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는 점등에 미루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개혁정책이 "체제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중국경제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상호의존관계를 심화하면 할수록 국내에서 자율성과 국가주권이 약화될 수 밖에 없으며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중산층의 증가는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국은 장기적으로 경제구조가 사회구조와 정치구조를 변화시키는 양상 속에서 공산당의 힘이 약화되고 점차적으로 권위주의적인 다변화 사회로 변화해갈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중국의 개혁·개발이 급격한 정치개혁으로 이어질 경우 구소련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최근 발생하는 지역주의와 지역간 격차현상이 이러한 암시를 뒷받침 해주고 있음.

2. 중국의 경제개혁 및 전망

가. 개 황

- '78년 이래의 개혁·개방노선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대폭 가미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확립을 '92년 제 14차 당대회에서 선언함.
- 경제체제 및 경제발전 모델
 -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사회주의적 사회보장제도에다 시장경제의 가격기구를 접목시킨 사회주의 시장경제(Market Socialism) 제도임.
- '92년 중국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며 대폭증대된 가운데 양호한 성적을 거둠.
 - 생산증대 → 소득증대 → 소비증대 → 투자증대 → 생산증대로 이어지는 양성순환과정에서 모든 부문에 걸쳐 성장을 기록함.

- 인민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물가를 6-9%로 유지하며,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도입등 국영기업결손보조금을 폐지하는 등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할 전망이다.

< 1993년도 경제전망 >

경 제 지 표	예 상 치
- GNP	13% 성장
- 국민소득	13% 성장
- 공업총생산액	19% 증가
- 농업총생산액	3.5 - 4.6% 증가
- 전사회고정자산투자	8,600 - 9,400억 원
- 사회상품소매총액	15 - 18.6% 증가
- 소비자물가상승율	6 - 9%
- 주민저축예금액	21% 증가
- 재정수입	13.3 - 17.9% 증가
- 재정지출	13.5 - 15.3% 증가
- 재정적자	100 - 290억 원
- 주민수입증가율	16%
- 소비증가율	15%

2) 장 기 전 망

- 중·장기경제계획을 통하여 안정·성장·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전망이지만 등소평사후의 보혁간 갈등, 군부와 지방관료세력의 대두 여부등 중국의 국내 정세변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임.
- 향후 2000년도의 1인당 GNP는 '80년 대비 4배로 증가한 1000불의 달성은 무난할 것임. 인민의 생활은 개도국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며 계획목표를 2-3년 앞당길 가능성도 있음.

< 중 · 장기계획의 주요목표 >

	단 위	1995년 (목표)	2000년 (목표)
GNP	억 원	23,250 (1991 ~ 1995년 6%)	31,100
· 농업총생산	억 원	8,780 (1991 ~ 2000년 5%)	-
· 공업총생산	억 원	32,700 (1991 ~ 2000년 6.8%)	46,049
1인당 GNP	불	700	1,000
주요 상품 생산			
· 식량	억 톤	4.5	5.0
· 석탄	억 톤	12.3	14.0
· 철강	만 톤	7,200	8,000
· 발전량	억 Kw/h	8,100	11,000
· 화학비료	만 톤	10,100	12,000

3) 과 제

○ 개혁에 대한 논쟁

- 개혁정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써 인플레이, 투기등 경제적 혼란과 이중가격구조의 심화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개혁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
- 「개혁은 유지하되 조정정책은 유지」한대로 개혁파와 보수파의 타협으로 경제가 운영되고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省간 갈등

- 중앙과 지방간 분권화(수출입권한 및 투자유치권 등)의 추진으로 중앙정부의 통제기능이 약화되고 있음.
- 지방省간에는 재정수입확보를 위하여 省간 제품판매 제한등 보호주의가 만연함.

○ 재정적자의 지속

- 군사비증가, 농산물 매입가 인상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372억 원), 국영기업의 적자보전(446억 원), 채무상환의 급증으로 인한 재정적자('92년 현재 237억 원, GNP의 1.2% 규모)가 확대 추세임.
- 설비투자과 중복투자의 증가, 적자기업의 증대가 발생하고 있음.

○ 높은 인플레이와 구조조정

- 높은 경제성장률과 통화량 증발은 인플레이를 가속시켰으며, 과열경기의 폭발이 예상됨.
- 지역별, 항목별 합리적 투자조정과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전반적인 기업경영 및 생산의 효율성 제고

○ 사회간접자본 설비의 부족

- 교통, 운송, 항만, 통신시설의 낙후와 에너지 부족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선진장비·기술의 습득과 자원확보가 관건임.

○ 외채원리금 상환부담

- 정부차관의 비중은 줄어드나, '90년 이후 국제금융기관등의 차관 급증으로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외채상환부담율(DSR)은 10.3% 수준이나, 8.5 계획기간중 상환외채가 전 외채상환의 25%에 달해 향후 원활한 외자도입과 채무관리 노력이 주요 관건임.

○ 실업자 증대

- 국영기업의 잉여인원이 2,500 - 3,000만명으로 추정되므로 대책이 필요함.
- 실업보험제도의 확충과 잉여인원의 흡수를 위한 3차산업의 육성이 시급함.

Ⅲ. 한·중 양국의 협력 및 교류현황

1. 한·중 수교의 의의 및 전망

가. 한·중 수교의 의의

- 향후 외교에 있어서 안보의 비중축소
 - 중국의 지원없이 북한이 독자적 군사행동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이 최대 안보위협요소가 되어 왔음.
 - 중국·북한 대 한·미·일 안보체제의 대립적 위치에서 새로운 지역안보체제로의 전환 가능성
- 통일의 마지막 외부장애요인 제거
 - 한·중 수교는 중국의 "하나의 조선" 정책에서 "두개의 한국"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한반도의 통일이 민족자주적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함을 의미
- 대북한 개방압력 강화효과
 - 북한을 맹목적으로 지지해온 중국과의 문호개방은 북한의 패쇄주의 정책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며 남북한 직접교류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됨.
- 지역안보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증대
 -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일본·러시아가 대치되어 있는 형상임.
 -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는 이들의 안보에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적극적인 지원이 예상되며 우리의 능력에 따라 이들 주변 강대국들이 적절한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게 하는 구심적인 역할수행도 가능
 -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수교는 또한 최근 일본의 재무장 및 군사적 팽창에 상당한 견제가 되었을 것으로 분석됨.

○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기대

- 중국은 북한과 긴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즉 기본적으로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북한에게 꼭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국가이고 북한에 대한 소련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시점에서 중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증가. 북한에서 보더라도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익을 근거로 대변해 줄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의견을 끝까지 거스르지는 못함.
- 중국은 북한이 핵무장 할 경우 동북아 전체가 불안정해질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중국이 주변환경의 평화적 유지라는 목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함.

나. 한·중 관계의 전망

1) 문제점

- 중국과 한국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호 적대개념의 정치체제를 이루고 있고 아직도 북한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의 역할을 맡고 있어 갈등의 소지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함.
- 동북아 신질서 형성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계, 대만·중국관계, 역내 국가간의 군비경쟁 추세등 역내갈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 관계역시 상호불신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자기중심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음.
- 중국은 현재의 성장속도로 보아 머지않아 세계 제 4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여 국제무대에서 엄청난 정치·경제력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한·중간의 외교의 불균형이 예상됨.

2) 우리의 입장

- 중국과의 수교가 마치 당장 우리의 안보와 경제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나 소망적 사고에의 도취에서 깨어나 장기적이고도 실익위주의 정책을 펴나가야 함.
- 오랜 역사의 단절로 인한 상호이해의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간 문화, 학술, 사회적 교류중심을 통해 한국을 알리는 한편 궁극적으로 중국이 우리의 민족적 자긍심을 존중케 하고 우리를 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인정케 유도하는데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함.
- 한중 정치, 외교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 "국제적 위상의 제고", "민족통일 과업의 성취"로 집약됨.
 - 통일후의 한반도 안보까지 감안한 중장기적 협력관계의 구축을 위해 한·중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더불어 경제교류, 과학기술협력등을 상호간 총체적 안보영역으로 유도해야함.
 - 중국의 주권과 지역적 역할에 대해 존중해 주는 대가로 이에 상응하는 한국 나름대로의 주권과 지위를 중국이 존중해 주도록 요구해야 함. 또한 동북아 지역에서 향후 중국과 일본의 패권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견되는 바, 양국과의 적절한 균형외교로 이들의 경쟁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유도해야 함.
 - 한·중 관계의 개선이 북한의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고 남·북·중 3자간의 협력관계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한중, 남북관계 개선이 주변국에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게 다원적 전략관을 키워나가야 할 것임.

2. 한·중 경협의 현황 및 전망

가. 현 황

1) 한·중 교역

- 한·중간 교역은 80년대 중반이후 급격한 증가세('85~'92년간 년평균 32.3% 증가)를 보여 '92년에 82억불 규모에 이름.
- '92년에는 무역협정 발효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차별관세가 폐지되고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92년대비 89.5% 증가하였고, 수입은 국내경기의 저조 및 조정관세 부과의 영향 등으로 전년대비 8.3%에 그침.
- 중국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91년 기준), 우리나라는 중국의 7대 교역국으로서 양국은 상호간에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부상
- 우리나라 총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9년 2.5%에서 92년 5.2%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중국의 총수출입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도 89년 2.8%에서 92년 4.4%로 증가
- '93년도 대중국 수출은 US \$69억 정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양국간 교역비중 추이 >

(단위 : %)

	'89	'90	'91	'92
중국의 對韓교역비중	2.5	2.8	3.8	5.2
한국의 對中교역비중	2.8	3.3	4.3	4.4

- 수출은 섬유류, 철강·금속, 화학제품등 공산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수입은 농산물, 광물등 1차 산품이 주종을 이루어 양국간 교역은 비교우위에 따른 분업의 형태를 이루고 있음.

2) 對 中 투 자

- 對 중국 투자추이는 '89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 '92년 말까지 426건에 3억 6천만불의 투자사업이 허가 되었으며, 임금상승등 국내투자환경의 악화와 한·중관계 개선추이를 반영, '90년 이후에 추진되었음.
- 對 중국투자가 우리나라의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년 건수기준 16.5%, 금액기준 6.3%로서 중국은 '91년에 이어 '92년에도 우리의 최대투자대상국이 되었음.

< 對 중국 투자추이 >

	'89 이전		'90		'91		'92		누 계	
	허가	실행	허가	실행	허가	실행	허가	실행	허가	실행
건수(A)	14	7	36	23	111	69	265	171	426	270
금액(B)백만불	13	6	52	16	81	42	216	141	362	205
건당투자금액 (B / A)	0.9	0.9	1.4	0.7	0.7	0.6	0.8	0.8	0.8	0.8

- 對 中 투자는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원자재를 이용, 제 3국 수출을 목표로 한 국내경쟁력 저하업종의 해외이전투자가 주종을 이룸.
- 업종별로는 섬유·신발·가죽제조업·완구·식료품 가공등 중소경공업의 소규모 투자와 생산된 반제품의 국내도입을 위한 투자가 증대
- 지역별로는 광둥성, 북경지역에서 직항로개설로 인한 교통 편의와 아국동포의 활용이 가능한 요녕성, 산둥성등 발해만 지역으로 투자가 집중화

나. 향 후 전 망

- 한·중 경험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가속화 되는 경우 보다 안정적이고 확대 지향적인 방향으로 이행, 촉진될 것임.
 - 중국의 전방위 개방정책 실시와 분권화 조치로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이 더욱 증대되고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라 내수시장이 개방되어 우리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이며 지역경제권 구상이 구체화 됨에 따라 진출지역이 다변화될 것임.
 - 양국 경제구조가 복잡다기 해짐에 따라 종래의 무역·투자일변도에서 기술·과학, 자원개발, 환경협력 등으로 보다 구체화되면서 협력대상업종도 제조업에서 백화점, 금융, 플렌트등 비제조업(3차산업) 분야로 이행 확대되고 협력 규모도 중소기업형 소액투자 진출방식에서 대기업 혹은 제 3국과의 공동진출이 가시화될 것임.
 -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로 생산효율이 높아짐에 따라 가격 및 비가격 양면에서 상품의 수출경쟁력이 제고되어 해외시장에서 우리상품과의 경쟁관계는 점진적으로 심화될 전망이다.
- 對中수출은 단기적으로는 중국경제의 고도성장 지속에 따른 수입수요의 증가, 중국의 GATT가입을 위한 무역투명성 제고 및 미·중간 301조 합의사항(50개 품목 관세인하)이행 약속등 수출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증가될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GATT 가입이후 내부지침에 의한 행정규제를 강화하여 수입을 억제할 것이나, 중국경제의 높은 성장세 지속에 따른 소득수준향상과 건설설비투자수요 증가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임.
- 對中수입은 단기적으로는 저가농산물 수입관리대책의 효과 등으로 농산물은 수입 증가세가 안정될 것이나 기타 공산품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공산품 수입수요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중기적으로는 중국제

품의 국제경쟁력 제고, 대대적인 수출확대 정책의 추진, 우리 경제의 성장에 따른 수요증가로 큰 폭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중국의 직접투자 확대 유치정책 및 우리 기업의 對중국 투자에 대한 관심고조 등을 고려해 볼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등 영향으로 대기업 중심의 대형투자사업과 자원개발 참여확대로 증대될 것임.

- 장기적으로 중국 8. 5계획기간중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건설, 아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자원개발등 경제성에 입각하여 상징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확장할 필요가 있으나, 양국은 상호 경제기술교류대상이며, 동시에 경쟁대상이란 인식을 가져야 함.

Ⅳ. KOICA의 對中國 協力方向

1. 기본 협력방향

- 對中國協力は 정치·경제 등 종합적인 국가이익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따라서 경제대국으로 서서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인도적차원에서가 아니라 전략적 차원에서 철저한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KOICA의 예산상 제약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원조실시로 원조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이를 위해 무상자금협력 보다는 기술협력에 중점을 두는 원조방식 채택이 바람직함. 즉 무상자금원조는 제한된 예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운바, 우리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한 기술원조 위주로 추진해야 할 것임. 또한 기술협력을 통한 다양한 인적교류의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 중국을 연구해 나가는데 많은 기회제공이 될 것임.
- 통일외교 및 민족적 차원에서 중국교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위주로 지원하여 중국내에서의 교민들이 원조혜택의 수혜자가 되어 그들의 中國내 영향력 확대 및 생활향상에 기여해야 함.
- 이념의 차이로 아직까지 양국간에 상호불신과 이해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수생 초청등의 인적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2. 구체적 협력방안

분 야 별	수 단 별	기 대 효 과
경제 분야	○ 연수생 초청 (KDI의 IDEP) ○ 전문가 파견	○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전수 ○ 중국 고위관료의 친한국화 ○ 남·북한 통일에 대비, 對 사회주의체제 협력경험 축적
행정 분야	○ 연수생 초청 (공무원 연수) ○ 전문가 파견 ○ 개발조사	○ 한국의 행정기법의 수출로 중국 정부의 행정 효율성 제고 ○ 중국 고위관료의 친한국화
환경 분야	○ 연수생 초청 ○ 전문가 파견 ○ 기자재 공여 ○ 개발조사 (개발조사시 환경 문제 고려) ○ 공동 세미나 개최	○ 황사와 산성비등에 의한 한국에의 영향분석 및 환경문제 해결방안 모색 ○ 오염감소 효과 ○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 부각 및 인식도 제고
BHN 분야	○ KYV 파견 ○ 연수생 초청 ○ 전문가 파견 ○ 기자재 공여 ○ 프로젝트 실시	○ KYV 파견을 통해 중국의 對 한국 image 고양 ○ 원조이념 충실 ○ 병원 건립지원 등으로 아국의 image 고양
자원 개발 분야	○ 전문가 파견 ○ 연수생 초청 ○ 개발조사	○ 향후 사업에 공동참여 가능 ○ 중국의 광물에 대한 자료수집 ○ 근거리 자원공급선 확보 ○ 아국기업의 진출지원
농업 분야	○ 전문가 파견 ○ 연수생 초청 ○ KYV 파견 ○ 기자재 등 공여 ○ 개발조사	○ 농경방식 및 품종이 우리와 비슷하여 기술이전 용이 ○ 새마을운동등 우리농촌문화 보급을 통해 서민층의 한국에 대한 인식제고 ○ 기술이전시 UR에 대비 경쟁력을 잃어가는 품종위주로 지원하고 우리의 향후 주력 품종을 배제함으로써 중국과의 농산물 경쟁을 사전에 방지
Infra-structure	○ 개발조사(EDCF와의 연계) ○ 연수생 초청 ○ 전문가 파견 ○ 국제기구와의 co-financing으로 소규모 project 실시	○ 한국의 경험에 대한 가시적 효과 ○ 중국에 대한 자료수집 ○ 타기관이 보유한 자료공유 ○ 아국기업의 중국진출 지원

※ 수단별은 위에서 부터 순서가 우선순위를 나타냄

V. 對中國 協力の 효과

1. 긍정적 측면

가. 안 보 적

- 양국간 협력관계의 증진은 공동이익 분야를 점차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안보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가능함. 이는 중국을 활용하여 북한을 견제케 하여 북한의 개방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향후 남북통일의 기반조성이 가능함.
- 對中國 경험확대는 중국시장경제화를 촉진하고 시장경제화의 성공적 수행은 결국 중국의 민주화로 이어져 적성국의 아마자로 부터 완전히 탈피할 수 있음.

나. 통 일 외 교 적

- 사회주의 체제와의 경제협력 경험을 통해 향후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대북한 경험 모델제시 가능
-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감안할 때 대중국 교류확대는 남·북한·중국 3자간의 협력, 또는 대북한 간접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중국 교포들의 생활개선, 자금심 함양, 남한에 대한 모국관 제고를 위해 기여 가능함.

다. 경 제 적

- 중국의 경제대국으로의 성장에 대비 미리 한·중간 경험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향후 주요수출시장 및 자원공급로로써 역할을 담당케 할 수 있음.
- 현재 민간부문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진출기업이 중국내의 행정적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빈번함. 따라서 중국과의 정부간 협력관계 구축은 민간부문의 투자의 행정적 애로를 해소하는데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음.

- 동북아 지역에 기술·자본·노동의 제요소를 결합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타경제 bloc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 형성에 이바지

라. 기 타

-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수집을 통해 중국에 관한 전문가 양성
-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불신 제거 및 이해도 고양

2. 부정적 측면

- 중국은 우리를 제치고 통상규모 11위권으로 부상하는 등 세계경제에서 이미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분야면에서도 우리의 경쟁대상이 되는 품목을 수출업종으로 삼고 있어 중국에 대한 원조가 '부메랑' 효과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93년 국방비를 12.5% 증액하는 등 일본과의 경제관계속에서 군사적 팽창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중국에 대한 경협이 중국의 군사무장을 간접적으로 돕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중국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의 재원이 극히 미약하여 상당한 원조재원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원조효과의 가시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민간부문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규모 정부간 경협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Ⅵ. 결 론

1. 중국과의 정치·외교적 관계증진은 동북아의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한·중 양국은 역사적·문화적면과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적 성격으로 볼때 경제 협력의 잠재력도 매우 큼.
2. KOICA도 이와 같은 테두리에서 우리의 정치·외교 및 경제적 역량을 최대한 고양하는 방향으로 對中國協力 정책을 구체화 시키는 노력이 요구됨.
3. 이를 위해 KOICA는
첫째 중국을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둘째 제한된 재원으로 원조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분야 및 수단을 선택하여 對中國 협력실시가 요구됨.
셋째 협력지역으로는 우선 중국의 한인교포 거주지역에 그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야하며 ODA 규모가 확대되면 협력범위를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함.
넷째 이와 같은 KOICA의 對中國 협력을 통해 장차 강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중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전문가를 배양하여 국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 Appendix >

I. 북방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훈령(국무총리 훈령 제 278호)

1. 기 본 원 칙

- 북방교류협력은 정치, 경제 등 종합적인 국가이익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함.
- 북방교류협력은 국가안보, 우방과의 협력관계 및 상호주의원칙등을 고려하면서 "특정국가"와의 관계개선, 한반도의 긴장완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 북방교류협력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추진하여야 하며 동시에 안보위해 요소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함.
- 북방교류협력은 국민합의의 기초위에서 추진함.

2. "특정국가"와의 일반교류 · 협력사업

가. 기 본 방 침

- 관계부처는 언론, 문화, 예술, 학술, 체육, 관광 등 일반교류 ·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북방외교추진협약화의 방침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나. 일반교류 · 협력사업

- "특정국가"와의 언론, 문화, 예술, 학술, 체육, 관광 등 일반교류 ·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무부장관은 허가에 앞서 관계부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언론인의 왕래, 상주, 보도협조 등에 관한 사항은 공보처장관이 관계부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국제대회에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외무부장관등 관계부처장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되, "국제대회의 유치"조정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 199호 및 제 229호)을 준수함.

Ⅲ. 한·중 경제협력에 관한 통계

1) 대중국 교역추이

(단위 : 백만불, %)

	'89	'90	'91	'92
교역규모 (증가율)	3,143 (3.2)	3,821 (21.6)	5,812 (52.1)	8,218 (41.4)
수출 (증가율)	1,438 (△15.4)	1,553 (8.0)	2,371 (52.7)	4,493 (89.5)
수입 (증가율)	1,705 (22.9)	2,268 (33.0)	3,441 (51.7)	3,725 (8.3)
무역수지 (통관기준)	△267	△715	△1,070	768
직접교역	39.2	52.6	59.7	67.3

2) 대중국 품목별 수출추이

(단위 : 백만불, %)

	'90	비중	'91	비중	'92	비중
농산물	19	1.2	31	2.3	42	0.9
화학제품	180	11.6	364	26.5	801	17.8
섬유류	663	42.7	959	69.9	1,278	24.4
철강·금속	115	7.4	272	19.8	1,047	23.3
기계류	60	3.9	111	8.1	261	5.8
전기·전자	10	0.6	308	22.5	417	9.3
기타	169	10.9	139	10.1	657	14.6
계	1,553	100.0	1,371	100.0	4,493	100.0

3) 대중국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 : 백만불, %)

	'90	비 중	'91	비 중	'92	비 중
농산물	598	26.3	1,054	30.6	1,239	36.2
광산물	343	15.1	391	11.4	519	15.2
화학제품	527	23.3	754	21.9	567	16.5
섬유제품	469	20.7	669	19.4	813	23.7
철강·금속류	239	10.5	380	11.0	272	7.9
기계류	31	1.4	67	2.0	71	2.1
전기·전자	22	1.0	59	1.7	133	3.9
기타	39	1.4	67	3.0	111	0.0
계	2,268	100.0	3,441	100.0	3,725	100.0

4) 대중국 업종별 투자실적('92년말 누계 허가기준)

(단위 : 백만불, %)

	총계	제조업					비제조업		
		누계	섬유	신발·가죽	음식료품	전기·전자	누계	수산업	음식숙박
건수	426	404	105	42	28	26	22	9	5
금액	362	333	70	43	14	42	29	3	23
건수비중	100.0	94.8	24.6	9.9	6.6	6.1	5.2	2.1	1.2
금액비중	100.0	91.9	19.3	11.9	3.9	11.6	8.0	0.8	6.4

5) 대중국 지역별 투자현황('92년말 허가기준)

(단위 : 백만불, %)

	건 수	구 성 비	허가금액	
			구 성 비	
발해만지역	213	50.0	199	55.0
· 산둥성	144	33.8	127	35.1
· 북경시	21	4.9	38	10.5
· 천진시	36	8.5	20	5.5
동북지역	162	38.0	110	30.4
· 요녕성	100	23.5	67	18.5
· 길림성	31	7.3	11	3.0
· 흑룡강성	31	7.3	32	8.8
화남지역	25	5.9	32	8.8
· 광둥성	18	4.2	22	6.1
화중지역	22	5.2	22	6.1
· 상해시	6	1.4	7	1.9
기 타	4	0.9	0.9	0.2
계	426	100.0	362	100.0

6) 대중국 분야별 협력 전망

(단위 : 억불, 증가율 %)

	'92	'93	'95	2000
- 교역액 (억불)	82 (41.4)	104 (26.2)	148 (17.5)	258 (9.3)
· 수출 (억불)	45 (89.5)	58 (28.0)	87 (20.4)	131 (10.1)
· 수입 (억불)	37 (8.3)	46 (24.4)	61 (13.7)	127 (8.1)
- 투 자 (억불)	2.1 (266.6)	2.8 (33.5)	4.4 (22.6)	8.5 (10.6)
- 인력고용(만명)	1.3 (6배)	2.0 (56.3)	5.6 (58.1)	19.8 (18.6)
· 인적교류 (만명)	8.8 (54.3)	11.3 (28.6)	15.7 (16.2)	36.7 (17.1)

7) 동북아 경제권 국가의 생산요소의 특징

구 분	노동력	자 원	자 본	기 술	경영노하우
한북일중소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 풍부, ○ 여유, △부족

Ⅳ. 일본의 對中國 협력동향

가. 개 요

- 일본의 대외원조전략은 특정대상지역에서의 경제적이익확보, 즉 자원확보 및 상품 시장보호와 정치적 영향력증대를 중심으로 하여 왔으며 특히 아시아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가 일관된 원조정책임.
- 60년대와 70년대 아세안 등 동남아시아지역 중심의 원조정책이 점차 중국중심으로 이행하고 있는데 일본에게 있어서 중국은 무한한 자원의 제공자로서 뿐만 아니라 거대한 상품시장의 매력 등 경제적요인과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지위를 높여 아태지역에서의 국제관계를 주도하기 위한 필요성 등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도 협력 필요성이 높은 나라임.
- '72년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 중국은 일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협력대상국의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中日협력관계는 '79년의 오오히라(大平)총리 訪中 이후 더욱 강화되어 '82년 - '86년 기간중 중국은 일본의 2국간 ODA의 최대수혜국이 되었으며 '87년이후에는 제2위의 수원국으로서 계속 그 중요성을 부여받고 있음.
- 한편 일본은 과거의 대륙침략에 대한 중국민의 감정을 고려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전후배상문제에 대해 부담을 가지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입장임.
- 일본은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중국내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중국의 주요경제개발 사업에 직접참여, 관련자료 및 정보확보에 주력함으로써 중국 시장공략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일본의 중국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의 對중국 ODA공여 기본방침으로는 원조에 있어서의 서방 원조국과의 연대 강화, 다른 아시안아제국 즉 ASEAN제국과의 형평유지, 군사면에 대한 협력은 고려하지 않음 등을 들 수 있음.

< 일본의 對中國 ODA 공여현황 >

(단위: 백만달러)

년 도	증 여			차 관	합 계
	무상자금	기술협력	소 계	지출 純額	
86	25.7 (5)	61.2(12)	86.9(17)	410.1(83)	496.9 (100)
87	54.3 (10)	76.0(14)	130.3(24)	422.8(76)	553.1 (100)
88	52.0 (8)	102.7(15)	154.7(23)	519.0(77)	673.7 (100)
89	58.0 (7)	106.1(13)	164.1(20)	668.0(80)	832.2 (100)
90	37.8 (5)	163.5(23)	201.3(28)	521.7(72)	723.0 (100)
누 계	311.9 (6)	617.3 (13)	929.2 (19)	3,880.5(81)	4,809.7 (100)

나. 무상자금 협력

- '80-90년 까지의 무상자금 협력을 총계하면 630.99억엔으로 이는 일본의 대개도국 전체 2국간 공여에 있어 10위가 되며 유상자금협력 2위와 비교하면 보잘것없으나 무상협력이 '80년 부터 개시된 것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님. '91년 만을 고려하면 총액 66.5억엔으로 7위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의 무상자금 공여경향으로는 내륙지역으로의 확대진출, 원조프로그램의 소규모 다안건화, 환경분야에 대한 협력강화등 임.
 - 내륙지역으로의 확대진출이란 최근 원조프로젝트가 연해 도시부에서 중앙내륙부로 점차 이동하고 있는 것을 말함. '80년대 전반 까지는 원조 흡수능력을 갖춘 北京, 上海등 연안도시부에 대한 프로젝트가 많았었는데 '91년경 부터는 내륙지역에 대한 안건이 눈에 띄게 증가함.
 - 소규모 다안건化는 과거 지배적인 원조프로젝트였던 도시지역 대형프로젝트가 감소하고 소규모적인 프로젝트가 많아 지고 있다는 것임. 급증하는 중국 정부의 원조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프로젝트를 보류하고 소형·소액의 안

- 이후 차관공여는 제1라운드(1980년-84년)에 3,309억엔, 제2라운드(1984년-89년) 4,700억엔 및 일본정부가 공약한 개도국 자금환류조치분으로 700억엔을 공여하였으며, 1990년 부터는 제3라운드(1990-95년)공여계획에 들어가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일본의 對중국차관 분야별 승인현황(%) >

분 야	수송	사회서비스	농업	전력가스	상품차관	통신	개발금융
비 율	54.2	4.8	3.0	13.2	11.6	6.7	6.2

- '91년말 현재 OECF의 對중국 용자승인액은 1조 1,230억엔으로 이는 전체승인액의 10.5%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90년 부터 상환을 시작, 상환누계 63억엔, 대부잔고 7,325억엔으로 집계되고 있음.
- 제 1·2라운드(1980-89년): 1·2라운드의 프로젝트는 중국 내륙부에서 연안지역을 지향한 운수교통중점의 개발패턴을 보임. 농업진흥을 위한 화확비료 공장·댐 건설, 철도 및 항만, 발전소의 건설및 보수프로젝트가 차관공여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秦皇島, 청도, 연운등 주요연안부의 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그 이익을 내륙지역에 재투자한다는 전략하에 추진함.
- 제3라운드(1990-95년): 3라운드 프로젝트는 6년간 42안건에 총 8,100억엔(이중 400억엔은 자금환류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3기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안건의 다양화가 두드러지며 내륙지역에서 연안지역으로의 운수교통중심 개발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임. '92년도에 북경-하얼빈간 장거리 전화망 건설계획및 교량·항만건설사업등 5건이 결정됨. 끝.